

議案檢討報告書

1. 發議 또는 提出者：大田廣域市長
2. 件 名：大田廣域市勞動福祉委員會및基金造成運用條例案
3. 案件要旨：別添參照
4. 檢討意見：別添參照

위 議案에 대한 檢討事項을 別添과 같이 報告합니다.

1996年 11月 29日

文 教 社 會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鎮 鎭



大田廣域市勞動福祉委員會基金造成運用條例案

檢 討 報 告 書

1996年 11月 29日

文 教 社 會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鎮 鎬

大田廣域市勞動福祉委員會및基金造成運用條例案

檢 討 報 告 書

이 條例案은 1996年 11月 12日 大田廣域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6年 11月 15日 當 委員會에 回附되었음.

1. 提 案 理 由

-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노동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위한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 대전광역시 노동복지위원회 및 기금조성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노·사·정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산업평화의 정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主 要 骨 子

- 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기금의 조성·관리·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안 제2조내지 제4조)
- 나. 기금은 시의 출연금, 유관기관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11조)

다. 기금의 지원결정은 시장이 기금의 이자액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안 제13조)

3. 檢 討 意 見

- 동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노동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위한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노·

사·정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산업평화의 정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으로 그 절차 및 형식과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 다만, 지방자치법 제133조 즉, 재산 및 기금의 설치조항과 지방재정법 제110조 즉, 기금의 운용조항등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 조성된 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세출예산에 편성 운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13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직접통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 사항으로 이는 “한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는 지방

재정법 제29조 즉,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사항이므로 대전광역시에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공감을 한다 할지라도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예산총계주의 원리와 연계하여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